

2008 새해설계 ②

포천경찰서장 김귀찬

관계기관 참여 치안협의체 구성 기초질서 확립

2007년 5대 범죄발생 대비 검거율 99.4% 경기도 2위 기록

포천지역 치안여건은 도시형과 농촌형이 혼재되어 있다. 소홀함과 포천동은 도시형 치안수요가 많고 관할범위는 좁은 편이다. 여기에 비해 일동과 이동, 관인 등은 농촌형 지역으로 치안수요보다 관할범위가 매우 넓다.

농촌지역은 이웃간에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시비나 폭력이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해소되지만 도시지역은 사소한 시비도 경찰이 개입하고 있다.

포천지역은 서울시 보다 1.4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넓은 면적에 비해 경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포천경찰서는 가능한 한 도시형 지역에 경찰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농촌지역은 자율방범대와 활용에 부족한 경찰인력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자율방범대 등을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안 사각지대 순찰활동을 보완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사람은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지역은 교통사고나 사건발생이 집중되어 있어 교통이나 유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부족한 경찰력은 지방청의 협조를 받아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범죄를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찰조직의 기본은 상사가 지시하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김귀찬 포천경찰서장이 취임한 이후 직원들에게 지시에 의한 업무추진보다는 각자 직책에 맞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순찰요원은 순찰을 주요 업무로 하고있기 때문에 방법취약 지역이나 우범지는 관리자보다 더 잘알고 있다. 담당이 자발적으로 생각하면서 근무하게 되면 지시에 의한 근무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파출소장은 인력 배치를 잘 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순찰할 것인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일선 직원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2007년도 한해 동안 포천지역 살인 1건, 강도 2건, 강간 24건, 절도 546건,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은 2006년 대비 19.9%가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 5건, 강도 20건, 강간 24건, 절도 546건, 폭력 869건으로 총 1천464건이다. 이는 2006년 살인 6건, 강도 7건, 강간 35건, 절도 372건, 폭력 801건 등 총 1천221건으로 전년 대비 범죄발생이 243건이 증가해 19.9%가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범인검거에서는 2007년 발생건수 1천456건에 1천648명으로 검거율은 99.4%에 달한다. 이는 2006년 1천222건 발생에 991명 검거한 것에 비해 검거건수 465건에 검거율은 46.9% 증가해 범인 검거율 경기도 2위를 기록했다.

2007년도 포천관내 교통사고는 한해 동안 총 997건이 발생해 34명이 사망하고 1천78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2006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총 970건에 사망 40명, 부상 1천735명에 비해 사고건수는 증대되었지만 사망사고와 부상자가 다소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액과 물적 피해액은 2006년도에 비해 2007년에 다소 증가했다.

또 대형사고발생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운전이 갈린 사람은 지난 한해동안 단속음주 운전 745명, 무면허 운전 303명,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70명 등 1천118명이다. 같은 기간 2006년에는 단속음주 642명, 무면허 운전 402명,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자는 모두 76명 등 1천120명이다.

김귀찬 경찰서장은 "2008년에는 포천지역에서 4월9일 국회의원 선거와 6월4일 포천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지난해 12월부터 총선대비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13일 선거사범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보강해 선거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불법선거 운동을 단속하고 있다.

김귀찬 서장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 운동을 적발하기 위해 파출소와 지구대 직원들이 매일 1건 이상 첩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역을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조장하는 불법선거 운동은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포천경찰서 중점시책에 대해 김귀찬 서장은 "지역언론과 관계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체를 구성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몇 년 전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이 생활화가 되지 않았을 때 언론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정착화 된 것처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홍보와 각 마을 이장들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포천경찰서는 오는 3월초에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3월 중순부터는 교통사고 위반사범과 주차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질서 위반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경계가 어려워지면서 절도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귀찬 서장은 "4개 시군에 걸쳐 120여 차례 전선을 출동 절도범을 검거했다"면서 "살인범과 같은 중대범죄는 줄어들었지만 빈집털이와 같은 절도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경미한 절도사건은 신고하는 것보다 많다고 보고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 절도사건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수사상황에 따라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침입절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절도 금액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과장이 직접 피해자를 방문해 범인침입에 따른 피해자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을 물론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상황을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해 주고 있다.

또 포천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하고 있다. 이는 김귀찬 서장이 부임한 이후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김귀찬 서장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지구대나 파출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궁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음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김귀찬 서장은 시민들에게 "총선과 보궐 선거를 앞두고 금품과 향응 등 불법선거 운동에 현혹되지 말고 정책과 인물을 보고 선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서장은 "지역이 선거로 인해 분열되지 말고 오히려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같은 모든 일은 포천시민들이 한 차원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hshwn 기자 forme65@paran.com

취재파일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사격장 피해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

포천시의회 특위, 주민신고 창구개설 필요



하승환 본지 취재국장

포천시의회는 관내 군부대사격장에 대한 이용도가 집중화될 것을 우려해 지난 2007년12월21일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격장 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사격장 특위는 7만3천평의 원평사격장과 국내 최대 규모인 미군 영평사격장, 동양 최대 규모의 승진사격장 등 포천관내 한정하더라도 8개 사격장에 1천30만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격장에서는 연중 사격훈련과 각종 군수물자 수송과 훈련차량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이 발생한다. 또 사격훈련 중에 포탄이 민가에 떨어지고 소음과 진동에 의한 가축사태, 건물균열, 분진 등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같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희생양 역할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논리에 의해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군현대화 사업에 따라 성능이 훨씬 좋은 무기로 사격을 하다보면 이전의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때문이다. 또 사격장에 대한 이용빈도가 높아져 인근 지역주민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포천시의회는 이같은 피해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피해발생을 예측해 주민피해 방지대책 강구 및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격장특위를 구성했다. 또 사격장 특위 운영과 관련해 포천시 예산에 1억5천만원을 반영하고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격장 특위는 운영 기본방향으로 ▶반세기 동안 피해민을 감내해 온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 ▶한미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직간접 주민피해 상환조사 ▶15만 시민의 쾌적한 삶 보장을 위하여 원평사격장과 영평 및 승진사격장 이전 촉구 ▶국가균형 발전법을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지역을 고려한 법안 마련촉구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촉구 등을 삼았다.

사격장 특위는 또 세부운영 계획으로 지난 1월 피해조사 대상지를 선정 후 1월23일과 24일 강원도 철원군을 방문해 군부대사격장 피해사례와 사격장이전 추진현황 등을 파악했다. 또 경기도 화성시를 방문해 매한지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전략과 반향부지 공원환경계획, 매한지주민대책위원회 활동 현황을 청취했다.

사격장 특위는 또한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 파주시와 전북 군산시 직도사격장 현황 파악에 나선다. 파주시의회를 방문해서는 군부대관련 특위 운영계획 및 활동현황 파악과, 미군공역지 무상반환 촉구성명서 등을 파악한다.

아울러 군산시를 방문해서는 군산미군기지우리찾기 시민모임 활동현황과 직도사격장 자동제점장비(WISS)설치허가에 따른 SOC사업 유치전략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사격장 특위는 지난 15일 포천시의회 자율위원의 날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소

관계자로부터 용역의뢰에 따른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발전종합대책 수립' 관련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통일문제연구소에서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건물, 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군사시설로부터 이격거리 유지, 고도제한, 관측 및 시계유지 등 법적 의무를 지게되고 이로 인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극도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포천시의 경우 국내 최대 미군 훈련장인 영평사격장과 동양 최대 규모의 승진훈련장 등 대규모 군부대 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분진, 가축유산, 수질 및 토양오염 등 직간접 피해에 수십년 동안 노출되어 온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1998년부터 2006년8월까지 포천시가 밝힌 영평 미군사격장 관련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만 하더라도 35건이나 된다. 피해유형은 불법 및 도비탄 낙하 7건, 헬기저공비행 9건, 산발발생 8건, 기름유출, 교통사고 등이다.

아울러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포천지역민들은 '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피해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사람이 군사시설로 인한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제한이라고 두 번째는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정신적 피해, 셋째는 군병력 이동으로 인한 교통통제 및 혼잡이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사격장 및 훈련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격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군 사격장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정도, 사격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이 선행 조건이다.

이같은 자료를 국회와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 제공하고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포천시의 경우 대규모 사격장이 집중되어 있다. 사격장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조사를 위해서는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하고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유사한 피해지역을 방문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의회, 시민단체 활동 상황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격장 특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시의회 의원들은 전문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을 해 줄 자문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아울러 주민 피해상황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주민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특별법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조부 의원이 걸어온 길**

포천초등학교 졸업(제52회)  
 포천중학교 졸업(제18회)  
 대광고등학교 졸업(제24회)  
 경희대학교 법대 졸업(제24회)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수료(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육군 법무관(제26사단 검찰관, 제6군단 군판사)  
 서울, 대구, 광주,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수원(초대), 대전(2대) 보호관찰소 소장  
 한나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제17대 국회의원(국방위원회)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한나라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제17대 이명박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경기북부 본부장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5.31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한·불가리아 의원 친선협회 이사  
 한·아일랜드 의원 친선협회 이사  
 한·중 친선협회 지도위원  
 재외동포문제연구원 회원  
 한국외교포럼 위원  
 한나라당 안보특위위원

포천초등학교 총동창회 감사  
 포천중학교 총동창회 이사  
 대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경희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포천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부사관협회 자문위원  
 포천시 장애인연합회 고문변호사

**함께 걸어야 길이 넓습니다!**

-개인만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한 후원회당 500만원까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인원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조세특별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은행계좌를 통한 후원 : 농협 346-12-023181(예금주: 이상산)  
 국민은행 219401-04-098107(예금주: 이상산)

**국회의원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5호  
 Tel. 02-788-2589, Fax. 02-788-3335

**포천시사무소**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76-2번지 제1정당 2층 고조부 후원회사무실  
 Tel. 031-536-7777, Fax. 031-536-4444

**연락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51-3  
 Tel. 031-833-6630, Fax. 031-833-6632

**덕일주유소가 '태봉주유소' 로 새롭게 변신합니다!**

**개업기념 주유시 무료 세차**

**대표 김영근**

GS칼텍스 태봉주유소

주소: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89-3 Tel. 031) 542-0994